
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

'26. 8. 28. [금]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	2
III. 추진 전략	5
IV. 중점 추진과제	6
1.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	6
[1] 청년 일자리 지원 [첫 일자리-성장-정착]	6
[2] 창업 사다리 강화 [준비-성장-재도전]	9
[3]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[교육·훈련]	11
[4]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[주거·자산]	12
[5] 청년 삶의 기반 강화 [일상회복 등]	15
2. 청년의 정책 참여·추진 기반 강화	18
3.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	21

I. 추진배경

- ◇ 청년에게 구조 전환기 충격 집중 + 청년의 성장정체는 국가 리스크
→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'최우선 투자'로 청년정책을 추진

□ [현황] 구조적 전환기 충격으로 인해 청년들의 성장경로가 악화

- 최근 청년세대가 성장단계별 이동의 어려움에 직면 중이며
AI 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되어 부담 가중
 - 쉬었음 청년인구 확대*, 자산격차 심화**, 결혼·출산 지연 등으로
인해 청년세대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가
 - * (2030세대 쉬었음 인구) '26.7월 기준 65.1만명('16.7월 대비 +24만명 증가)
 - ** (세대간 자산격차) 고령층-청년층 자산격차 '24년 기준 3.9배('12년 2.4배)
 - AI와 관련된 초기 일자리 감소*,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·
교육·문화 분야 등의 동반 약화가 청년들의 생활 기반을 위축
 - * 최근 4년('22.6~'26.6)간 청년 일자리 28.5만개 감소 → 이중 94%(26.8만개)가
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며, 청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구조

□ [시사점] 청년의 성장정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리스크

- 청년의 사회진입 지연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성장 잠재력을
약화시키고, 결혼·출산 지연으로 저출생을 구조적으로 고착화
 - 인적자본과 역량축적의 기회를 약화시키고 소비·투자·창업 등
경제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어 국가·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우려
 -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초혼연령 상승, 출산 지연이 누적
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·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악화

👉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'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'가 아닌
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'최우선 투자 정책'으로 전환할 필요

Ⅱ.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

- ◇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단절, 정책 체감도 부족, 단기 대책의 한계 →
 ①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② 추진기반 강화 ③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

1 문제 진단

① 청년층의 첫출발 지연 등이 누적되어 성장 사다리가 단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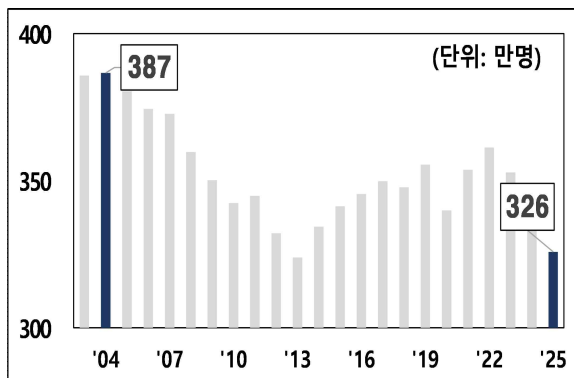
- ① (첫출발 지연) 청년층이 소득·자산을 축적할 사회 진출 기회는 감소하는 반면, 요구되는 준비기간·숙련·경험은 지속 증가

- AI 확산으로 초급·반복 업무 등의 초기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의 경력채용 선호로 청년층의 일자리 진입 장벽이 심화*

* 신규 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 감소: ('06) 33.6% → ('25) 25.2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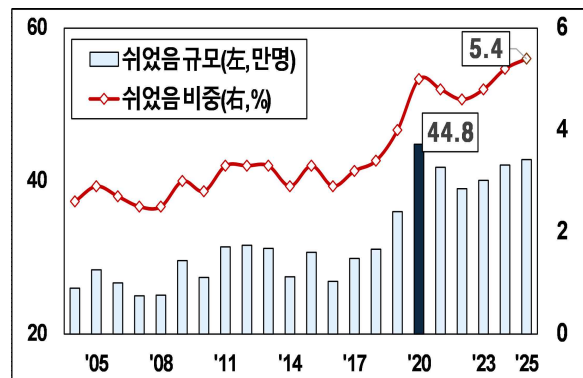
미취업 청년 중 1년이상 미취업을 48.6%, 3년이상 19.4%('09 금융위기 이후 최고)

<20대 신규 취업자수 추이>



* 출처: 데이터처(경찰인구조사)

<쉬웠음 청년(15-29세) 규모 및 비중 추이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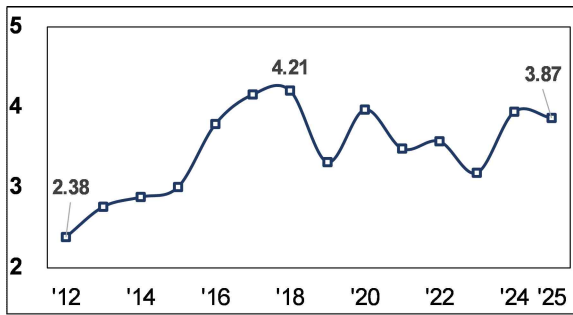
* 출처: 데이터처(경찰인구조사)

- ② (악순환 구조) 사회진출 지연과 함께 주거·자산 등 초기 출발선 차이가 청년의 후속 단계 성장을 정체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

-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이 소득축적, 자산형성을 저해* 하고 주거독립 등의 어려움으로까지 연결되는 부작용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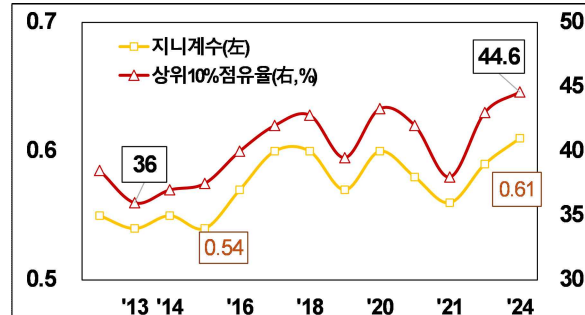
* 청년층은 '21년 대비 '25년 기준 평균 순자산액(연령별 가구주)이 유일하게 감소한 "부모세대 이후 가난한 최초의 세대"(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)

<청년층-고령층 자산격차 배율>



* 출처: 데이터처(가계금융복지조사)

청년(29세 이하) 세대내 불평등



* 출처: 한국은행('26.2)

③ (삶의 질 저하) 청년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는 경제활동·사회참여·가족형성 등 청년의 삶 전반·행동에 악영향을 초래

- 경제적 부담 가중, 미래 불안, 불확실성 등은 청년의 구직 단념, 고립·은둔 증가, 가족형성 지연,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연결

② 전달체계 부족, 접근성 악화로 청년정책 신뢰도·체감도 문제

○ (정책 신뢰도) 청년층의 박탈감 확대, 과소 대표된 목소리* 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

* 저소득·미진학·비수도권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과소 대표될 우려
(대학 미진학 청년은 SNS 미사용 비율이 6.3%p 높고, 여가 활동빈도는 29.2% 낮음)

○ (정책 체감도) 청년정책 정보 접근의 어려움*, 정책 과정상 실질적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가 저하

*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위: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('23. 대한상의)

③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 곤란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지속

○ (구조적 리스크) 청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인구감소,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지원대책으로 대응 어려움

- 세대 간 이해조정과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교육·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는 논의가 지연될수록 청년층은 부담 증가로 인식

*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(명): ('22) 40.6 ('40) 60.5 ('50) 78.6

①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강화

- (첫출발·성장 촉진) 진로·탐색, 교육·훈련을 거쳐 취·창업단계에 진입하고 근속·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
- (출발선 격차 완화) 소득·지역 등에 따른 교육·주거·자산 격차가 다음 성장단계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보강
- (삶의 기반 강화) 고립·은둔 등 취약청년 회복 강화, 문화·교통 등 생활편의 향유, 혼인·출산 등 가족형성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확충

② 청년이 쉽게 이용하고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참여·추진기반 강화

- (접근성 제고)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 상황별 맞춤 정책을 쉽게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안내받도록 개편
- (참여 확대) 청년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·예산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
- (기반 정비) 효과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 신설,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 지원기반 정비

③ 중장기 시계의 '2045 국가발전전략' 수립

- (국가발전전략 수립) 인구구조 변화, 양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비한 2045년 국가발전전략 및 핵심 구조개선 과제 로드맵 수립

☞ '청년들의 성장과 회복 사다리'의 보강·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

- ① 금번 대책으로 청년의 시급한 어려움을 해소하고
- ②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병행(별도, 연내 마련 목표)

Ⅲ. 추진 전략

목표

출발선의 공정성 제고 + 성장·재도전 사다리 구축

기본
방향

- ① 성장 이동성 강화·출발선 격차 완화·삶의 질 제고 투자 확대
- ②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·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 기반 강화
- ③ 중장기 시계의 '2045년 국가발전전략' 수립 추진

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(재정·세제·금융 등)

성장 이동성
강화

(일자리, 창업)

- ① 청년의 진로탐색·조기 경력확보 등 첫 취업 진입 촉진
- ② 일경험·채용·근속을 잇는 경력성장·장기근속 강화
- ③ 모두의 창업 등 누구나 도전하는 창업기회 확대
- ④ 사전준비·사업화·금융·재기를 연결하는 창업 사다리 구축

출발선의
격차 완화

(교육, 주거, 자산)

- ① AI 기본역량 확충, 교육기회 격차 완화 및 지역인재 육성
- ②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
- ③ 주택금융 3중세트, 월세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보강
- ④ 영유아·취업준비·사회진입 청년의 생애자산 형성 지원

삶의 질
제고

(복지, 문화 등)

- ① 구직단념·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의 회복·사회참여 지원
- ② 문화패스, 모두의 패스,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편의 확대
- ③ 군 복무·제대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
- ④ 결혼 불이익 해소, 혼인·출산·양육 메리트 강화 지원

② 청년의 정책 참여·추진 기반 강화

- ✓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·고도화 등 전달체계 혁신 강화
- ✓ 청년형 국민참여예산, 청년주도 정책설계 등 정책·예산 참여기회 확대
- ✓ 미래대응기금 신설, 청년 체감도 평가 추진 등 성과 중심의 제도 정비

③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

- ✓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「2045 국가발전전략」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,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을 제시

IV. 중점 추진과제

1

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

- ◇ ① 일자리·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
- ② 교육·주거·자산의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
- ③ 복지·문화·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

1

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·정착·성장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

문제진단	개선방향
• 경력직·수시채용 확대로 직무정보·일경험이 부족한 청년의 구직기간 장기화 • 첫경력 기회 부족에 따른 사회진출 지연, 훈련·일경험과 실제 채용 간 연계 미흡 • 대·중소기업간 임금·근로여건 격차로 청년층의 취업·근속 유인 부족 •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	✓ 첫취업 도전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, 청년-기업 일자리 매칭 강화 ✓ 훈련-일경험-채용 연계형 지원으로 첫경력 확보 + 경력관리 강화 ✓ 청년·기업에 대한 채용·근속 인센티브 ✓ 민간·공공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

□ [탐색·매칭] 청년의 진로 탐색부터 기업 직무수요 매칭까지 연계

- (청년 첫취업)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* 도입

* '취업경험 없는 청년'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(K-유스개런티)

- 청년 상황에 맞는 진로탐색-일경험-훈련-취업연결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월 +5만원 인상(60 → 65만원, 중위 120% 이하)

- (매칭 플랫폼) 교육·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·공공기관 등 일자리·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신규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

* 청년카페·센터(시그니처 3~5개소)를 리모델링해 인력(노동부)-일감(중기부 등) 매칭

□ [경력·채용] 현장 중심의 첫경력 기회 지원 + 채용연계 강화

- (첫경력·현장 프로젝트) 대학생 등 청년이 사회진입 이전부터 기업·지역 현장에서 직무경험과 문제해결 역량을 쌓도록 지원
 - 대학생의 현장실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정부·기업이 공동으로 실습지원비(월 230만원)를 부담하는 신규첫경력 프로젝트 신설(6만명)
 - 대학생이 민간·공공·지역의 실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신규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조기 실무경험을 제공(약 2만명)
- (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) 6만명 대상(월 230만원 지급, 정부:기업 50:50 부담)
- (문제해결형) 대학·기업 공동발굴 문제의 비교과·교과과정 운영(약 1천팀)
민간·지역·공공이 등록한 문제의 정규교과 과정 운영(약 4천팀)
- (일경험·직업훈련) 경력직 중심 채용에 대응하여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직무·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경험·직업훈련 확대
 - K-뉴딜 아카데미 확대(1 → 5만명), K-디지털트레이닝 AI 과정 확대(1 → 2만명), 인턴형 일경험(2.3 → 2.5만명) 등 지원 규모 확충
- (채용연계 강화)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, 지역 대기업에게 신규채용 장려금 지급
 - * 중소·중견기업(전국): 年 720만원 / 지역 대기업(시범적용): 年 360만원
 - 정부와 기업이 AX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에 최대 2년간 임금·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신규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도 신설

□ [근속·성장] 청년의 장기 근속·자산 형성 지원 확대

- (재정지원) 중소·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 장려와 소득보전을 위해 청년 지원금 지급을 年 최대 360 → 900만원으로 확대
 - 수도권 중소·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신규지원금(年 240만원)을 신설하고,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*도 대폭 강화
- * (현행) 年 240 ~ 360만원 → (개선) 年 720 ~ 900만원

- (근속 세제지원^{기발표})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(5년간 90% → 6~10년)
- (자산형성 연계)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력 축적 기간이 자산 형성으로 연결도록 ^{신규}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 신설
 - 지방 소재 중소기업 근속 청년은 기여금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12%에서 25%로 2배 이상 상향(일반 중기: 12% → 15%)
- (新 노동형태 지원) 프리랜서 등 청년의 과거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되고 다음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^{신규}경력관리 지원
 - 과거 경력(프리랜서·플랫폼 고용), 직무능력(자격·교육·훈련 등) 등 이력인정서 통합 발급으로 원활한 이·전직 지원(^{가칭}커리어뱅크)

□ [일자리 확충] 민간·공공 일자리 확충 + 일자리 창출 유도

- (일자리 확충) 민간·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'30년까지 20만개 확충
 - 신산업, 중소·중견기업, 과학기술·문화·국토·농업·금융 등 민간 일자리를 '30년까지 10만개 확충 지원
 - 생산적 공공일자리, 사회연대경제, 교육·복지·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여 '30년까지 10만개의 공공 일자리 창출
- (일자리 창출 유도)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*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

*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^{산업부}, 유턴기업 투자보조^{산업부}, 외국인투자 현금지원^{산업부}, 지역투자 촉진보조금^{산업부}, 유니콘 브릿지^{중기부} 등

< 국가전략산업 수요 맞춤형 고급·실무인력 양성 지원 >

- (직업훈련) KDT AI 캠퍼스 확대 등 AI·반도체 직업능력 양성('27년 2만명)
- (고급인력) 거점별 특성화 대학·대학원 인력양성('27년 1.2만명)
- (실무인력) 직업계고·전문대·폴리텍 등 첨단산업 실무인력 양성('27년 0.7만명)
- (청년뉴딜) K-뉴딜 아카데미, 부트캠프 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('27년 7.5만명)

문제진단	개선방향
• 창업에 관심이 있어도 아이디어를 경험·검증할 기회 부족으로 실제 도전 미흡 • 초기 청년기업은 교육·준비 부족, 사업화 자금 및 전문 보육·투자연계가 어려움 • 휴·폐업의 위험을 청년 개인이 부담하여 실패 이후 재기가 어려운 구조	✓ 모두의 창업 등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창업 도전기회 확대 ✓ 검증·사업화 자금·전담 멘토·투자 유치를 연계한 청년특화 창업패키지 신설 ✓ 휴업·폐업·재창업까지 보호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구축

□ [도전·발굴]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창업 도전기회 대폭 확대

- (**모두의 창업**) 아이디어를 가진 **청년 누구나 참여** 가능한 **개방형 창업 프로그램**을 확대하고,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
 - 모두의 창업 **선발인원을 확대**(1.5→2만명)하고 ^{1단계}사업화 자금을 **1인당 500만원**(現 200만원)으로 상향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
- (**창업 네트워크**) 선배 창업가, 동료 도전자, 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**창업 커뮤니티 멤버십 문화** 확산
 - 창업중심대학 지원 확대(827 → 약 920개社)를 통해 지역·대학의 청년 창업기업 발굴, 교육·보육 강화 등 창업 저변 확대

□ [사업화·성장] 유망 청년기업의 준비·사업화·투자유치 집중 지원

- (**사전준비·교육**) 발굴된 아이디어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**교육·코칭·현장경험**을 통해 **사업모델과 시장성 검증** 지원
 - (**청년창업패키지 교육**) 아이디어 검증,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, 경영·기술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**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자문·멘토링** 강화
 - (**청년창농사관학교**) 청년의 창농 前 역량진단, 이론교육,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(가칭) **청년창농사관학교 과정** 신설('27년 1,150명 지원)

- (청년창업패키지)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**신규** 청년창업패키지 도입
 - 직접 투자기능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가 **선발부터 교육·코칭 및 투자 유치까지 책임** 지원(200개 기업 대상 최대 1.5억원 지원)
- (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^{기발표})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*에 대해 법인세·소득세 세액 감면을 우대 적용** 등 지원 강화
 - *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(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'27.2월 시행령 개정시 선정)
 - ** (기존) 수도권 과밀지역 50% / 수도권 일반지역 75% / 비수도권 100%
(개정) 수도권 과밀지역 **60%** / 수도권 일반지역 **85%** / 비수도권 100%

□ [금융·재도전] 창업·성장 자금 확대 + 휴·폐업 위기 보호

- (정책융자 확대) 담보·신용이 부족한 청년 기업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(scale-up)을 지원하기 위해 **저리·장기 정책자금 공급** 확대
 - 모태펀드를 통한 **청년창업펀드** 출자 예산을 확대(200 → 400억원) 하고 **청년전용창업자금** 지원도 확대(2,000 → 4,000억원)
- (창업안심보험) **신규** 창업 보험 재정 지원을 도입하여 휴업 시 경영유지, 폐업 시 재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신설
 -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에 대해 연차에 따라 **월 보험료의 60 ~ 80%**(0 ~ 2년차: 80%, 3 ~ 5년차: 60%) 수준을 정부 지원

구분	창업안심보험 주요내용
휴업	• 출산, 재난, 질병 등 휴업시 고정비용 월 10만원(최대 3개월)
폐업	• 철거비, 임차료, 임금, 재창업비용 등 최대 2천만원
업력도달	• 업력 3년·5년·7년 도달시 사업확장 격려금 최대 1천만원

* 보험 지원내용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과정에서 변동 가능

□ [일자리 창출] '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양성

- (청년 창업가)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, 4대 과학기술원*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**'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+α** 양성
 - * (현행) KAIST만 보유 → (개선) KAIST + **DGIST, GIST, UNIST**까지 확대

문제진단	개선방향
- AI 확산에도 청년의 전공·소득·지역별 교육·훈련 접근기회에 격차 - 수도권·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여건과 학생지원 격차로 지역인재 유출 가속	✓ 청년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역량 확충 ✓ 지방대학·지역인재 장학·교육투자 강화, 우수 인프라·교과과정 공유 지원

□ [AI 기본역량] 청년 누구나 배우고 활용하는 AI 교육기회 확대

- (**보편적 AI 역량**) AI를 일부 전공자의 전문기술이 아닌 **모든 청년이 학업·취업·업무에 활용 가능**하도록 기본 역량 확충 강화
 - 대학(원)생이 개인부담 없이 학업·연구에 AI 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의 **신규대학생 AI 공동구독** 지원
- (**AI 경력전환**) 기존 전공·경력에 AI를 결합한 **신규X+AI 전환 교육과정**을 신설*하여 AI 전환에 대응한 청년의 경력 재설계 지원

* 40개 대학 2만명 대상 / 교육비(670만원/年), 우수학생 인센티브(월 80만원) 지급

□ [지역인재]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+ 대학간 자원 공유

- (**지방대학·지역인재**) **신규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*** 신설,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(0.4→1.0만명) 등으로 우수인재 지역 유입 촉진
 - *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상: 30개교, 의·약학계열 제외
- 지역별 성장엔진·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**사립대** (일반·전문대)에 **신규인프라 지원** 신설(0.6조원)
- (**대학간 자원 공유**) 첨단장비·우수강의·공동교육과정 등 수도권-비수도권 대학간 분산된 자원을 공유하여 지역 인재 양성 지원

4

주거안정과 생애자산 형성을 통해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

문제진단	개선방향
• 소득 대비 높은 월세·보증금 부담, 전세사기 위험 등 청년 주거 불안정 • 초기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, 맞춤형 주택금융 부족 • 부모 지원 여부, 가구의 저축 여력 등에 따라 세대간 자산격차 및 양극화 심화	✓ 월세·보증료·전세대출 지원 확대 및 임차 단계의 주거 안전망 강화 ✓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,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 추진 ✓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생애자산 구축 기반 마련

□ [주거안정·이동] 월세·보증금 부담 완화 및 주거 사다리 구축

- (청년 주거사다리) 월세 경감, 전세보증금, 내집 마련 패키지 지원
 - **청년 월세지원** 요건을 중위소득 100%(現 60%)까지 확대하고 **차상위 이하 청년**은 월세 지원기간을 **2배 확대**(24 → 48개월)
 - * (현행) '26년 중위 60% 154만원 (※ 근로소득 기준 최대 219만원(30% 소득공제))
 - (개선) '27년 중위 100% 273만원 (※ 소득공제 미적용)
 - **기발표** 청년(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)의 **월세 세액공제율**을 **우대** (청년: 17%, 일반: 15%)하고, **공제대상 한도**도 확대(年1→1.2천만원)
 - **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** 및 **청년주택드림통장**의 가입대상 소득요건을 기존 연 5천만원 대비 확대*
 - *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: 중위소득 200%까지 / 주택드림통장: 7천만원
- (청년공공주택^{기발표}) 역세권 입지, 넓은 평수 등 청년이 선호하는 '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' 신설·공급
 - * 지원한도 상향(최대 2.4억원) 및 입주기준 완화(소득 140% 등)를 통해 역세권에 거주 가능한 청년 전세임대 유형 신설
 -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**내 집 마련**이 가능하도록 **지분적립형·수익공유형** 등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추진
 - (지분적립형) 분양가 일부를 부담후 20~30년 동안 지분을 단계적 취득
 - (수익공유형) 주택기금이 구입자금을 저리 지원 후 향후 처분이익 공유

- (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^{기발표}) 자가·반전세·전세 등 청년의 실제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으로 주거안정 지원
- ‘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’으로 집을 사는 ^{신규}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을 통해 생애최초 **非아파트·오피스텔 구입** 자금 지원

- (요건) 만 39세 이하 &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, 4억원 이하·전용 85m² 이하
- (지원) 年 3조원 규모 2년간 공급, LTV 최대 80%, 대출금 우대금리(최대 2.1%p)

- ^{신규}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을 통해 전세+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(기존: 1개만 보증)하고, 지방·저소득 청년에 이차보전 지원

- (요건) 만 39세 이하 &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
- (지원) 대출한도: 임차보증금 90%, 2억원(신혼·유자녀: 3억원)
공급규모: 年 4.5조원(2년 한시 공급)

-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(보증비율 100%) 지원 대상·대출한도 확대

- (요건) 만 39세 이하(기존: 만 34세) 무주택 청년, 1인 年 7천만원 이하
- (지원) 대출한도: 임차보증금 90%, 2억원 → 신혼·유자녀는 3억원 상향
보증비율: 100%(기존)

□ [자산형성] 영유아~청년기 **초 생애단계별 자산 형성** 지원

- (영유아~청소년기)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·투자하는 ^{신규}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(만기시 0.6~1억원 수령)
-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차등 매칭, 저소득층(중위소득 50% 이하)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年 120만원 정액 지원

구 분	중위 50% 미만	중위 50~100%	중위 100~150%	중위 150% ↑
지원·혜택	정액 120만원	납입 50만원 매칭 100만원 (1:2 매칭)	납입 100만원 매칭 100만원 (1:1 매칭)	X

- (취업준비 청년) 미취업 청년이 취·창업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저리(2~5%)로 상환 가능한 **신규 청년기회자금** 도입(최대 2천만원)

- (지원대상)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(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제외)
- (지원조건) 생애 2,000만원(1회 최대 500만원, 연간 750만원 한도 대출)
- (지원특례) 취업준비 청년은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 혜택 부여(별도 신청·증빙)
고졸 미취업 청년 금리부담 완화(5 → 2.5%) 혜택 등

- (사회진입 청년) 사회에 진입한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과 주택·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**청년미래적금 확대·개편**

- 모든 청년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**일반형 상품의 소득요건을 폐지***하고, **우대형 상품의 지급비율도** 상향(12 → 15%)

* (現)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(총 6,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)

- (자산확대 지원)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 **재정·세제 등 자산 확대 기회** 지원

- (국민참여성장펀드) 서민 우선 배정 비중 확대(20 → 50%) 등
- (생산적금융 ISA) 국내 주식·펀드 투자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+ 납입금 소득공제

- 청년(총급여 7.5천만원 이하)의 **생산적금융 ISA 납입금에 대해 10% 소득공제** 제공 **기발표**
- 청년의 **퇴직연금(IRP)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 15%**로 우대 적용 **기발표**(일반: 12%)
- **신규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** 지원(1개월분 4.2만원) 등 청년의 사회보험 조기가입을 통한 장기적인 자립 기반 보강

문제진단	개선방향
• 미취업·구직단념 장기화가 고립·은둔, 관계단절 등 복합적 위기로 확산 • 교통비·식비 등 일상생활 부담 지속 소득·지역에 따른 문화 격차 존재 • 군복무 기간의 청년에 대한 혜택 부족 • 혼인신고시 정부 지원의 불이익 존재, 분산된 출산·양육 지원으로 체감도 부족	✓ 취약청년을 조기 발견하여 일상회복-사회참여-일경험 등 지원 ✓ 교통비·천원의 아침밥 등 부담 완화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, ✓ 군복무부터 제대후 사회복귀까지 자립 등 국가지원 강화 ✓ 혼인·출산 지원금, 아동기본수당 등 혼인·출산·양육지원 재구조화

□ [복지·회복] 취약청년의 일상회복부터 사회참여까지 지원

- (**일상회복**) 구직단념·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에게 구직·일상활동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**맞춤형 일경험·상담 프로그램** 확대

- (사회연대경제) 사회적 기업·마을기업·협동조합 등 **3,000명** 청년 일경험
- (맞춤형 지원) 취약청년 대상 **일경험 유형** 신설(맞춤지원형, 3천명)
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 확대(5.8 → 6.7만명)

- (**청년회복 성장사다리**) 고립·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**생활권 가까이**에서 일상·관계회복, 사회활동 등 **회복프로그램** 지원

- (시군구프로그램확충) 시도 청년미래센터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(120개소)과 연계하여 제공 확충(+6,000명)

□ [생활·문화]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

- (**생활·교통비**) 대학생이 **양질의 아침식사**를 **1천원**에 이용할 수 있도록 '**천원의 아침밥**' 지원 규모 확대(단가: 국비 2 → 3천원 등)
- 청년의 교통비 부담 경감,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위해
'**모두의 카드**' 대중교통 환급 지원 확대(청소년 유형 신설 등)

- (청년문화패스) 일부 청년에게 생애 1회 제공하던 문화패스를 모든 청년*이 매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 대폭 확대

* (현행) 만 19~20세 일부 청년 → (개선) 만 19~34세 모든 청년

- 공연·전시·영화·도서 등에 더해 체육 분야까지 범위 확대

* (국비) 수도권 10만원, 비수도권 15만원

□ [국방] 군 복무 ~ 제대 이후까지 자산 형성 지원

- (군복무 청년) 군인·사회복무요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* 지속 지원(지원규모: 1.9 → 2.1조원)

*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(55만원)에 정부지원금 100% 매칭

- 기발표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의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'29년말까지 연장(기존: '26말 일몰)

- (부서관 자산형성) 군 경력이 안정적 자산형성의 기반이 되도록 신규 부서관 단기복무적금 도입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

- '27년 이후 임관된 단기복무 부서관이 가입한 적금 납입액에 대해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(월 최대 30만원, 36개월)

□ [가족] 결혼 불이익 해소 + 혼인·출산·양육 메리트 강화

- (기발표 결혼 불이익 해소) 혼인신고 이후 부부소득 합산 적용 등에 따라 주거·대출·자산지원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개선

- 주택구입·전세자금 정책 대출의 소득기준 적용시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허용*

* (예) 5천만원 소득자 + 7천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(구입) 신청시
現: 부부합산 1.2억원으로 대출불가 → 改: 5천만원 소득자 기준 대출 가능

<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방안(6.9일 기발표) >

- (주거)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,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의 혼인시 계약연장 허용,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가산금리 인하 등
- (자산) 결혼 청년의 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,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 상향
- (세제)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,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확대

○ (혼인지원금 지급)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 제한 없이 혼인한 부부에게 신규혼인지원금 지원

-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 지급

○ (임산부 건강증진)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*를 12개월 공급 지원

*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, 무농약원료가공식품, 유기축산물, 유기수산물, 무항생제축산물(한우, 돼지고기, 유정란)

○ (양육지원급여 확대·개편)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신규아이맞이지원금 신설, 아동기본수당 도입('27.7~)

- (아이맞이지원금) 출생 아동들에게 출생순위, 거주지역에 따라 총 1,000 ~ 2,000만원을 지급(4회 분할지급)

- (아동기본수당) 아동수당 대비 2~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('27.7~)

* 지역별 차등 지급 + 0~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月30만원 추가

2

청년의 정책 참여·추진 기반 강화

- ◇ 청년의 정책 접근성·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청년 참여예산, 청년 정책영향평가 등 정책·예산 참여 기반을 확대

문제진단	개선방향
- 청년정책이 다양하지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 -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질적인 목소리 반영 및 청년참여 확대가 필요 - 정책·사업의 분산으로 효과성 우려 + 청년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필요	✓ 온통청년 플랫폼 AI 고도화 및 고용24 등 타 플랫폼 연계 확대 ✓ 청년 참여예산제, 청년 펠로우십 등 정책·예산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✓ 청년영향평가·체감도 지수 도입,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지원 기반 마련

□ **[전달체계] 온통청년, 고용24 등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·고도화**

- (**온통청년 고도화**) AI 기반 **맞춤 추천**, **선제 안내 기능**을 강화하고 정책 검색·신청까지 연계하는 **청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**로 고도화

부문	주요 내용 (예시)
맞춤형 검색·추천	AI·빅데이터 활용 기본정보(연령, 거주지), 이용·검색 패턴 분석 →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선제적 추천
지원 서비스 확대	온통청년-지방정부 플랫폼-혜택알리미 등 주요 정책플랫폼 연계 강화 + 청년 상황별 필요 지원사항 패키지 알림
접근성 편의	모바일 앱 구축, 필요한 혜택 푸쉬알림 제공

- (**고용24 고도화**) 청년들에게 **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**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
-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, 공공일자리 사업을 **한번에 검색** 하고, 참여·신청할 수 있도록 **원스톱 지원체계**로 개편
 -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구직자·기업 진단·분류, 구직자·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추진

□ [정책·예산 참여] 정책설계와 예산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

- (청년형 국민참여예산) 국민참여단 내 청년비중 확대, 토론형 국민 참여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책수요를 재정사업으로 반영

< 주요 내용(안) >

- ① (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확대) 국민 참여단 내 청년층 비중을 확대 (20.7 → 40%)하여, 국민제안 사업화·선정에 청년의 결정권 강화
- ② (토론형 국민참여 도입) 청년정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 위해 국민·전문가·담당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'토론형 국민참여*'를 도입
 - * (현행) 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 접수 → (개선) 대국민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정해진 사회이슈(청년정책 등)에 대해 국민·전문가·담당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사업 설계
- ③ (청년정책 관련 제안 발굴) '찾아가는 국민 제안'을 통한 간담회·면담*, 아이디어 공모전** 등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제안을 적극 발굴
 - * 각급 학교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취업지원), 청년미래센터(고립·은둔, 가족돌봄), 자립지원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
 - **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→ 분야별 우수 제안 인센티브(포상금 등) 지급
- ④ (청년세대 재정교육 강화) 청년 대상 온·오프라인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재정정책 역량을 강화

- (정책참여 확대) 청년의 관점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을 강화

< 주요 내용(안) >

- ① (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설치) 청조위 산하에 일자리, 주거 등 6개 분과 총 60명(청년 42명) 전문위 설치, 2년간 직접 청년정책 발굴·입안
- ② (정부위원회 참여 확대)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20%로 확대('26.4)* 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 관점 반영 강화
 - *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: (기존) 10% → (개선) 20%(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)
- ③ (청년정책 참여채널 다양화) 온라인 청년 참여단 설치(1,000명) 등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청년 누구나 정책 제시·논의 참여가 가능한 기반 마련

- (청년 주도형 참여 강화) 청년이 역량을 축적하고 지역·사회 프로젝트에 주도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

< 주요 내용(안) >

- ① (청년 주도형 재정사업)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사업을 청년이 직접 발굴·기획하도록 지원 (☞ 청년의 정책 경험과 성장 역량을 확충)

< 예시 사업 >

사업명	주요내용
청년마을 조성	소멸위기 지역내 청년주도 지역정착 생태계 구축(살아보기 등)
사회연대경제 일 경험	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청년의 일 경험 참여
청년 해외진출 사업	청년 주도 해외 현지 K-컬처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

- ② (청년정책 펠로우십 확대) 청년 인재가 정부·공공부문의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 (☞ 청년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)

□ [기반 정비] 체감도 높은 성과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

- (평가·효율화) 국가 정책의 청년영향평가 등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청년 참여기구·청년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
 - 청년정책의 인지도·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표·지수를 개발하고, 이를 바탕으로 청년 체감도 평가 실시('27~)
 - 청년정책 체감도 평가를 기반으로 청년 사업들의 우선순위 조정, 저성과·중복 정비 등 고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 추진*
- * (예) 청년 해외진출 사업: 20개 부처 60개 사업으로 산재 → 재구조화 추진
- 주요 국가정책의 청년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·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도 도입 추진
- (미래대응기금)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관련 계정을 운영
 - 청년의 일자리, 자산형성, 주거안정, 결혼·출산 등 성장단계 전반에 걸친 실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

- ◇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「2045 국가발전전략」을 수립하여
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과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을 제시

□ [방향] 다음세대가 주역인 2045년 시점의 국가발전전략 제시

- (비전) 광복 100주년(2045년)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
국가(rule-setter)로 도약하는 비전 제시
- (내용) 성장·포용·국격 등 국가적 지향점 설정과 핵심 전략 마련
→ 미래 사회 주역인 다음세대 관점의 중점 전략을 함께 제시
 - 청년이 생애 전반에 걸쳐 역량을 축적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
있도록 중장기 시계에서의 성장·자립 구축 체계를 설계·제시
 - 청년과의 상생방안 논의가 필수적인 교육·노동 등 구조개혁
주요 핵심과제를 제안하고, 단계별 공론화 등 로드맵 제시

□ [계획] 청년 등 국민 의견 수렴 → 연내 전략 마련·발표

- (국민주도 의견수렴) 폭넓은 의견수렴*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
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략으로 추진

* 대국민 공모(전략명칭, 아이디어 등), 청년 대상 설문조사, FGI(심층면접조사) 등

- (전략 수립) 연내 발표 목표로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

[참고] 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

정책 과제	소관 부처
1.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	
① 청년 일자리 지원	
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도입, 구직촉진수당 상향	노동부
■ 청년-기업·공공기관 매칭 플랫폼(플레이그라운드) 구축	노동부
■ 인턴학기(첫 경력 프로젝트) 및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도입	교육부
■ K-뉴딜 아카데미, KDT, 인턴형 일경험 확대	다부처
■ 기업 채용 장려금 지급(지역 대기업, 중소·중견기업)	노동부
■ 청년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	노동부
■ 중소·중견기업 취업 청년 근속 장려금 확대	노동부
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차등화	재경부
■ 중소기업 재직청년 청년미래적금 우대트랙 신설	금융위
■ 新 노동형태 경력관리 지원	노동부
■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인재 양성	재경부 노동부
② 창업 사다리 강화	
■ 모두의 창업 선발 확대 및 사업화 자금 상향 등	중기부
■ 창업 네트워크 확대 및 창업중심대학 지원 강화	중기부
■ 청년창농사관학교 도입	농식품부
■ 청년 창업 패키지 신설	중기부
■ 청년 창업기업(중소기업) 세액감면 우대적용	재경부
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융자 확대	중기부
■ 창업안심보험 도입	중기부

정책 과제	소관 부처
③ AI 역량 등 교육지원 강화 ■ 대학생 AI 공동 구독 이용료 지원 ■ 재도약 대학(X+AI 전환교육) 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■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및 개편 ■ 지방 사립대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 신설 ■ 공유대학 등 자원 공유 지원	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
④ 주거 안정 및 생애 자산 형성 ■ 청년월세 지원(중위소득 상향) ■ 청년 월세 세액 공제율 우대 및 공제대상 한도 확대 ■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기준 확대 ■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■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 추진 ■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(미래보증자리론 등) ■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및 도입 ■ 취업준비청년 청년기회자금 도입 ■ 청년미래적금 확대 및 개편 ■ 생산적금융 ISA 등 자산확대 지원 ■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	국토부 재경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재경부 복지부
⑤ 청년 삶의 기반 강화 ■ 취약청년 맞춤형 일경험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■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■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확대	노동부 복지부 복지부 농식품부

정책 과제	소관 부처
■ 모두의 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	국토부
■ 청년문화패스 개편 및 확대	문체부
■ 병 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	국방부
■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	국방부
■ 주택 정책대출 소득기준 합리화(신혼부부 중 1인 적용)	국토부 금융위
■ 혼인지원금 지급	성평등부
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	농식품부
■ 아이맞이지원금 지급	복지부
■ 아동 기본수당 지급	복지부
2. 청년 정책 참여 및 추진기반 강화	
■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	국조실
■ 고용 24 고도화	노동부
■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제도 확대	기획처
■ 청년정책 참여 확대(청년정책조정위 기능강화 등)	국조실
■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등 참여 강화	행안부 문체부
■ 청년영향평가, 체감도 지수 등 도입	국조실 등
■ 미래대응기금 도입	기획처
3.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	
■ 연내 목표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	기획처